## VI 결론

국내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은 거대재난리스크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종목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주로 보험가입 확대 지체, 손해율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부담 증가. 민영 보험산업의 참여율 하락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길게는 20년에서 짧게는 6년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국내 공·사협력 모델의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사협력 모델의 구성 요소 중 보험가입 촉진 제도, 효과적 거대리스크 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보험 모델 내에 총보험비용 관리와 리스크 예방 및 손실 경감 수단의 결합의 측면에서 국내 운영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국가 역할 측면에서 각 요소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입각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입 촉진 제도 측면에서 이 연구는 보험가입 확대가 필요한 고위험 영역의 대상자를 중 심으로 의무보험화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재난지워금 제도의 보험가입 구축 효과를 제 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으로 정책성보 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 간 리스크 공유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종목별로 따로 유영되는 국가재보험을 통합하여 재보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분산 효과를 제고하여 재정부담 효율화를 기하고 통합된 재보험의 재정 보증 방식을 국가기금형으로 하여 안정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리스크 재원 조달방안을 확충하는 추가적인 대안으로 대재해채권 발행을 축진하는 규제 정비와 거대 재난보험 준비금의 추가 확충을 유도하는 조세 제도 마련 등도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총 보험비용 관리를 위해 생산량 보장보험 성격의 초과보험 유인이 강한 정책성보험 모델 내 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보험상품의 보장구조, 요율 체계, 자기부 담 구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리스크 예방과 사고 발생 후 손실 경감을 촉진하도록 보험프로그램 내에 정부 주도의 리스크맵 개발, 이에 기반한 사전 재 난 경보시스템 및 예방적 인프라 구축 투자, 고위험 영역에 개발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 는 규제체계, 경제주체 및 지역공동체의 예방적 조치 실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결합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국가의 역할 측면의 개선 방안 연구보다 최근 민영 보험산업에서 나타난 참여율 하락에 많은 분석을 할애했다. 공·사협력 모델의 목적 달성에서 민간의 참여율 하락이 주는 부정적 효과, 보험회사의 참여율 하락 촉진 요인,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했다.

공·사협력형 정책성보험에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민간 자본, 특히 국내 원수보험회 사들의 리스크 부담 절대수준은 매우 낮다. 나아가 초기에 자본 조달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해외 자본 역시 최근 보유 수준을 급격히 축소했다. 민간 자본의 낮은 보유율은 가입률 제고를 견인하는 적극적 판매 활동을 약화시키고 총보험비용 관리를 위해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활용할 유인도 제거한다. 이것은 국내 여러 보험종목에서 나타난 낮은 가입률 또는 가입률 하락, 손해율 악화의 동인이었는데,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쇄적 영향은 결국 국가재보험자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나타나는 민영 보험회사의 역할 제약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례에서 보듯 국가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공유 후의 보험회사 수익성이 중소형 리스크 보유 참여를 유인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보험회사의 참여 의사결정 기준을 명목 수익률이 아닌 리스크조정수익으로 보았다. 리스크조정수익의 관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수익률을 산출하여 해당 종목에서 보험회사 참여유인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원보험 정책이 단기적인 손해율 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에 따라 보장 확대와 보장 축소를 반복하는 형태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원보험 정책의 변동성은 보험자에 정책 신뢰도를 낮추고 나아가 미래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참여 증대를 제약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재보험 정책이 국가 재정부담 절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책 변화의 주된 효과는 민영 보험회사의 자본 참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손익분담방식 국가재보험 분석에 마지막 장을 할애했다. 분석 방법론은 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과 손익시뮬레이션이었다. 미국의 경우 손익분담방식 도입은 국영 보험회사 방식의 원보험자 모델에서 보험사업자 참여를

통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장치는 재보험약정을 통해 민영 보험사업자에 목표 수익률(15.4%)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민영 보험회사 보유율 및 손익분담비율을 증가시키는 제도적 변화였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손익분담방식 도입이 국가 재정 부담 절감 또는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경험실적에 기초한 백테스트 결과 손 익분담방식 전환의 결과가 정책 목적과 달리 국가 손실 확대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손익시뮬레이션을 통해 손익분담방식이 국가 입장에서 최대이익-최대손실 변동폭을 증가시키고, 거대재난보험에서 국가 역할과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손익분담방식의 리스크조정수익이 민영 보험회사로 하여금 농작물재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의 참여 유인을 제거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은 국내에서 현재도입된 손익분담방식이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크게 억제하여 국가 중심의 공·사협력 모델로 전환해가는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대재난리스크의 보장공백 해소와 거대재난리스크로부터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제고라는 공·사협력 모델의 목적은 민영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에 참여하고 충분한리스크를 보유하고, 보장구조, 인수, 손해사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의 자본 참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협력 모델에서 국가재보험방식이 리스크조정수익을 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재보험자에 의해 대부분의 손익변동이 담보되어 민간 자본의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손익분담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가 또는 민영 보험산업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위기, 팬데믹 등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강건한 거대재난리스크 보장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여러 논점들은 국내 공·사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익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추정 손해율 시나리오 산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손익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국내 운영 경험은 거대재난리스크의 손해율 분포를 추정하기에 기간 측면에서 불충분하다. 손해율 시나리오 산출에서 대재해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연구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한 손해율 분포를 가정했을 때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손해율 분포를 기초로 리스크조정수익도 민영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산출 예시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둘째, 공·사협력 모델에서 국가 중심의 운영과 민간의 높은 참여를 가진 공·사협력 모델의 효과성과 효율성 비교는 별도의 논쟁적 이슈이다. 이 연구에서 국내 제도와 운영 사례가 민영 참여 유인 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지만, 사회적 후생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국가 중심 모델과 공·사협력 모델을 비교하는 연구는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사협력 모델 개선 과제로 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험프로그램 내에 리스크 예방과 손실경감 조치를 통합하는 것을 제시하였지만,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일반에서 국가의 역할이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간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가 열위에 있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프로그램 내에 이러한 조치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연재해 대응시스템의 인프라와 효율적 대응 역량이 열위인지는 비교하지 않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내 대응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